

이번엔 콜롬비아... 중남미 국가들 잇따른 반정부 시위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에 이어 콜롬비아에서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콜롬비아정부는 이번 시위가 다른 나라들의 시위처럼 장기화하거나 소요 사태로까지 번질까 잔뜩 긴장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가 콜롬비아 일간 엘티엠포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1일 오전 수도 보고타와 메데인, 칼리, 카르타헤나 등 전역에서 일제히 노동자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가 시작됐다. 콜롬비아에서 최근 몇 년 새 열린 최대 규모 시위로 예상되는 이번 시위엔 노동조합과 학생, 일부 원주민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요구사항도 다양하다. 노동자들은 이번 두께 콜롬비아 대통령이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고, 청년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등의 경제·노동 개혁을 준비 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전에도 시위를 이어갔던 대학생들은 정부에 교육 예산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정부와 반군이 맺은 평화협정의 충실한 이행과 최근 잇따라 살해된 원주민 지도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중도우파 두케 정부에 대한 불만

이 총체적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잇따른 시위사태를 본 콜롬비아 정부도 이번 시위가 어떻게 확대될지 몰라 긴장 상태이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지만, 치안이 불안한 데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높은 실업률 등의 문제에서도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번 시위를 앞두고 외부 세력이 잠입해 폭력 시위를 선동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20일 자정을 기해 육로와 하천의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또 보고타에만 이날 4천 명 이상의 경찰을 배치하는 등 경찰을 대거 투입하고, 지방 정부에 통행 금지령과 주류 판매 금지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시위대도 정부의 정책 후퇴나 대통령 퇴진 등으로 이어진 이웃 국가들의 시위에 자극을 받은 상태다. 다만 콜롬비아의 경우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는 요소가 없다는 점 등 때문에 칠레나 볼리비아와 같은 대규모 시위 사태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중, 한·일에 “미 중거리 미사일 배치 말라”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한국과 일본 정부에게 미국의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뉴스핌'에 따르면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지난 8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 직후 한국과 일본 정부에 이 같은 경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NF 탈퇴 이유로 중국의 미사일 개발도 언급했다.”며 “미국이 대(對)중국 억제정책을 경계해 한국과 일본을 압박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한·중·일 3국은 베이징(北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3개국 회담을 계기로 열렸던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며 INF 문제를

언급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중일관계는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가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외무상은 왕 부장의 발언에 대해 미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중국 미사일이야말로 일본을 사정 거리에 두고 있다.”며 “중국이 먼저 군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강 장관 역시 왕 부장의 발언에 “중국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와 관련된 보복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일 양국에게 INF문제에 대해 “동맹국 문제로 중국·러시아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자국 경제에 부메랑

지난 10월 일본의 한국으로의 수출액이 전년동월비 23.1%나 감소하며 올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런 수치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동한 지난 7월을 기점으로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같은 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도 전년 동월비 65.5%나 급감했다. 8년 전 동일본 대지진 직후(2011년 4월, -66.4%)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뽑아든 일본의 수출규제가 결국 일본 경제에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날 무역통계(속보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월 일본의 대한 수출액은 3,818억엔(약 4조1,240억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3.1% 급감했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동월비 12.0% 감소한 2,733억엔(약 2조9,5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본이 한국과의 전체 무역거래에서 거둔 흑자액(수출액-수입액, 1,085억엔)도 전년 동월 대비 41.5%나 감소했다. 과거 일본의 달러박스 역할을 해온 대한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일본으로선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일본 경제는 성장 둔화의 전조 증세로 여겨지는 '불황형 흑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일본의 전체 무역수지는 6 달만에 흑자(173억엔)로 전환됐으나, 어디까지나 수입액 감소율(-14.8%)이 수출액 감소율(-9.2%)을 상회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일본의 무역거래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나온, 지표상 흑자인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가했던 7월이 낙폭이 확대되는 분기점이었다. 일본의 대한 수출 감소율은 7월에 마이너스(-) 6.9%를 기록한 데 이어 8월 -10.3%, 9월 -15.9%, 10월 -23.1%로 갈수록 확대됐다.

일본 관광시장의 큰 손(전체 2위) 역할을 해 온 방일 한국인도 10월에 전년동월비 65.5%나 급감한 19만7300명에 불과했다. 방일 한국인 수가 반토막 났다고 했던 9월(-58.1%)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다. 가뜰이나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일본 경제에 '한국의 기여도'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형국이다.

부엌 & 화장실 Remodeling 전문 회사

각종 최신 캐비닛, Stone Counter Top 취급합니다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신용/정직/좋은 가격 & 실력있는 회사!!

CA Lic #:1051205

Pine Tree Construction 주정부 면허회사
필립 안에게 전화 주세요 **714.345.8768** 36 Discovery #100
Irvine, CA 92820